

호남 고속철 1,400억 원안대로 반영

■ 내일 예산안 처리 ... 광주·전남 현안 반영 실태

광주 가전로봇·U대회 유치 예산 등 처리 유보

여수공항 활주로·우주클러스터 與 반대 부딪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은 여야 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 간 입장 차 등으로 처리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소위에는 감액 대상 항목 중 위원들간 합의가 안 된 사회간접시설(SOC) 예산과 증액 대상 항목 중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까지 확정된 주요 항목은 호남고속철 건설 국비 예산 1천400억원(전체 예산 3천220억원 중 1천820억원은 철도공사 예산). 소위는 이날 호남고속철 예산에 대해 지난해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로 500억원 삭감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협조 속에 정부 원안인 1천400억원을 모두 반영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외에 대부분의 광주·전남 관심 예산은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우선 광주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20억원),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지원(18억원), 광주 태양광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20억원), 광주 LED실증센터(10억원), 광주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165억원), 여수공항 활주로(35억원),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비(30억원) 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조정에 없는 항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산강 수계 하천 정비사업 663억원, 한나라당은 4대강 하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반도대운하 사업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 4대강 하천 정비 내년 국고 예산 7천910억원 중 2천500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총 예산 중 영산강 예산 비율은 10%도 안 되지만 낙동강 예산이 4천500여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 시한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한구(앞쪽) 예산결산위원장이 10일 국회 소위원회회의에서 오후 회의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해남 화원과 진도 군내 산단진입도로 예산 186억원도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단 완공 시점에 맞춰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곡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 7천900여원 중 이천바 '형님 예산'의 일부인 포항 영일만 산업

단지 진입도로 예산이 243억원이나 돼 야당의 주목을 끄는 항목이다.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천520억원의 경우도 한나라당 이 의원은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원안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내년 사업비로서는 과다 책정됐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 처리가 유보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 의원은 "영남 쪽 예산 중 예비타당성 검토가 전혀 안 됐고 신규 사업이면서도 1천억원 이상이 계상되는 등 기준과 원칙이 무시된 예산이 많아 이 같은 부분을 들춰 내다보니 광주·전남지역 일부 예산이 검토 대상이 됐다"며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 예산은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예산 지키는 파수꾼 될 것”

예산특위 조정 소위 한나라 이정현·민주당 조영택 의원

“호남지역 예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호남고속철 예산을 지켜내는 등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예산조정소위 정원은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선진창조연대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 이중 광주·전남 출신 의원은 두 의원뿐이다.

그동안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보통 1명이 조정소위에 들어갔으나 이번엔 이 의원이 포함됨에 따라 광주·전남 예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10일 “한나라당 소속으로 호남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20여 년만의 일”이라며 “그런 만큼 호남 예산에 대해서는



조영택 의원 이정현 의원

감액은 막고 증액은 반드시 이뤄내는 등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일부 항목에 대해 의견 차가 있지만 우리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정난 가중 ... 복지사업 타격 가장 클 듯

■ 지방교부세 격감 ... 광주·전남 영향은

정부의 감세입법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격감이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지방재정 결손분이 6천57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광주시·전남도 지방 교부세 감소= 이한구 국회예결위위원장은 9일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조1천억원을 배정했지만, 이것 말고도 4조원대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부족분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정부가 제출한 1조

천억원의 예비비만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다”며 모두 4조5천억원의 추가 증액을 결의해, 예결위에 남긴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총 지방교부세의 1.6%인 4천934억원을 배정받은 광주시는 내년도에 약 200여원의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해 총 720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다.

◇광주·전남 지자체 후폭풍=지방교부세는 대부분 고정 경비와 사회복지예산, 지역 자체사업 등에 쓰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부세 일부 세목에 대한 위원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세율이 크게 줄어 현안 사업의 대폭 축소가 우려된다. 지난해 중부세를 통해 지역 지자체에 지원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2천928억원으로 광주시가 687억원, 전남도는 2천241억원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수준에서 100억원만 줄어도 도로개설이나 서민생활안정지원 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담양군은 올해 85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배정받았는데 내년에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이용료 감면 나이 논란

광주시 여성발전센터가 생리 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월 이용권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제 175회 정례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수영장 1일 입장료가 성인인 3천500원→4천원, 청소년 2천200원→2천500원, 어린이 1천700원→2천원으로 인상되고 월(1개월) 회비도 현행 4만6천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조례는 특히 수영장 한 달 이용권을 끊어도

광주시의회 ‘15세 이상’ 조례 심의

여성단체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생리 때문에 5~7일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구제방안으로, 회원 가운데 15세 이상 49세 이하 가입자 여성(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해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발전센터측은 지난달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한국여성의 초경, 폐경 나이와 폐경 여부에 따른 건강 영향’보고서를 근거로 감면 대상 나이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7년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서 생리 시작 연령이 평균 12.4세로 나타난 점 ▲수영장 이용자가 중학생보다 초등학교생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등은 이를 토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5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외 15세 이하, 49세 이상의 경우 ‘생리를 하는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치를 유감시릴 수 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지적이다.

조광환(민주·비례)의원은 “매월 생리 때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감안,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2008년 12월 21일(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1월 21일(일) 오후 6시 11월 21일(일) 오후 6시 11월 21일(일) 오후 6시